

2002년 문화예산에 비춰본 내년도 출판전망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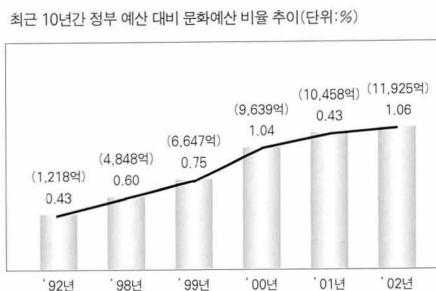
2002년도 문화예산이 3년 연속 정부예산 대비 1%를 넘어서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문화예산은 1조 1,925억원 규모다. 문예진흥이 5천여억 원으로 42%, 문화산업부문이 1천 9백여억 원으로 15.9%, 관광진흥이 2천 1백여억 원으로 17.9%, 문화재 부문이 2천 9백여억 원으로 24.2%를 차지한다. 특히 이번에 편성된 문화예산은 올해 1조 458억원 대비 14%, 1,467억원이 증액돼 전체 정부예산 증액 규모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여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해

문화예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부문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다. 한때 전액 삭감 위기에 내몰렸던 도서구입비가 올해 97억원에서 134억원으로 38.9% 증액됐다. 이는 학계 및 시민단체의 도서구입비 대폭증액 요구를 문광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도서관컨텐츠확충과 책읽는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의 노최영숙 사무국장은 “국민운동의 도서구입비 목표인 1천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삭감의 우려를 씻고 조금이나마 증액돼 다행이다.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벌인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서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식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을 펴나갈 생각이다”고 말한다.

정부는 또 문화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진흥에 5백억원을 신규로 반영했



다.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에 170억원,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에 187억원, 전략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1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25억원, DOI(디지털 문자 식별자 체계) 개발 등 정보화 사업에 48억원이 지원된다. 최근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급증으로 인한 도서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5억원이 신설되고, 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1단계 잔여 사업비로 473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부문은 15억원 인 63%가 줄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영상 진흥과 정향미 사무관은 “춘천 만화정보센터 가 내년 완공돼 올해로 지원이 끝났다. 오히려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은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한다. 또한 문화콘텐츠 진흥에 신규로 5백억원을 편성한 문화콘텐츠 진흥과는 출판만화 산업 육성 부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출판만화 시장의 확장세에 비춰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

출판 산업 정보화에 집중됐지만 미흡한 부분 많아

문화예산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출판계와

직접 관련된 부문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지원 등 몇 가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선임연구원은 이번 예산안이 총론적으로 역대 문화예산에 비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문화예산 가운데 출판관련 예산은 대부분 문화콘텐츠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IT환경을 활용한 출판 산업 정보화에 집중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실을 살펴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40% 정도 증액됐지만 공공도서관의 사정은 크게 다를 바 없다. 도서구입비 가운데 50% 정도가 정기간행물 구독료기 때문이다. 도서관 정보화에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져 소프트웨어의 확대에 중점을 뒀지만, 실질적인 도서구입비가 부족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신설된 문화콘텐츠 진흥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 문화 원형 콘텐츠 개발과 문화콘텐츠 해외 수출지원에 할애했다. 이에 대해 백연구원은 “문화콘텐츠 지원에 최근의 한류 열풍이 반영된 것 같다. 하지만 출판관련 지원은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적 기반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최근 대중문화분야의 상업적 성공만 봐도 그렇다. 앞으로 중국 내 한국 출판저작권센터 설립, 중국어 출판서지 데이터 등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중국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은 아직 국회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다른 부문에 비해 문화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됐지만, 도서구입비는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이고,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1%로 놓고 볼 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출판계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정보화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출판계가 전략적 협력체계를 갖춰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박옥순 기자